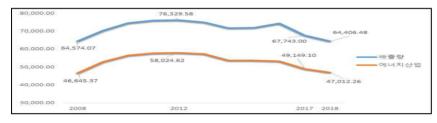
기후대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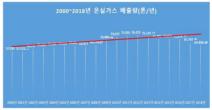
탈탄소 시회·경제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

-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,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('21.6.22.)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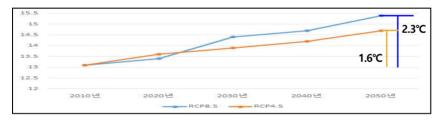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(현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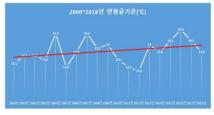
- (추진배경) 자연·사회재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지목,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 경쟁 가열, 우리 道도 기후위기 인식 기후위기비상 선언('20.6.5.) 선포
 - 기후위기대응담당 신설('21.1.), 안정적 탄소중립 사회 진입 가속화 추진
- (정책한계) 온실가스 감축 정책대상을 道 관리권한에 한정(산업부문 78%), 기후환경산림국 고유사무로만 인식(전 실국 참여 TF팀 필요), 공급 위주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도민 수용성 저하(수요자 중심 민관 거버넌스 구축)
 - < 경상남도 온실가스 배출현황(2008~2018),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>





< 경상남도 기온상승 현황(2008~2018), 경남연구원 >





☞ 지속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평균 기온('50년 2℃↑) 상승세, 탄소증립 체제 전환 요구

○ (추진전략) 2050 경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 목표 및 실효성 확보수단 등에 대한 도민참여형 중장기 전략 수립

□ 추진실적

- O 凡도민·全행정의 **기후위기** 인식제고를 위한 **강좌 및 실천운동 전개**
 -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등 국내 기후관련 전문가 11명 초청, 공무원, 도민 대상 실시간 온오프라인(도청 대회의실, 유튜브) 특별강좌 개최('21.3.2.~8.)
 - 지구의날 기념 기후주간 운영, 범도민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전개('21.4.22.~28.)
 - 경남·전남지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8) 공동유치 위원장 선임('21.2.26.), 경남도의회 COP28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('21.4.22.)

- 각종 정책의 기획, 예산편성·결산 등 全 단계에 기후영향평가제 도입
 - '21.3월~9월, 50백만원(연구용역비), 협상에 의한 계약(경남연구원)
 - '21년 추진사업 대상 기후위기영향평가 시범실시, '22년 본격 시행
- 2050 탄소중립과 그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구축
 - 탄소중립은 全 도민(산업계 포함)과 행정의 참여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, 경상남도 전체가 탄소중립을 향한 확신과 행동 결집 필요
 - 도지사 등 행정, 입법, 산업계,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경남도민회의, 분과위원회 등 400여명 참여(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 '21.6.22.)
- 도민참여형 숙의기반 2050 경남 탄소중립 학술연구용역 수행
 - '21.6월~'22.3월, 280백만원(연구용역비), 협상에 의한 계약(입찰공고)
 - 에너지 전환 분과 등 7개 분과별 숙의기반 상향식 탄소중립 전략 도출

□ 주요 성과 : 탄소중립 사회 진입을 위한 제도적, 정책적 발판 마련

-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도내 이해당사자들 간 (행정내부, 도-시군, 민-관-산-학-연 등) 합의 도출,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
- 도민참여형 숙의기반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으로 정책의 수용성 확보 및 도민의 저탄소 생활실천의지를 반영, 안정적 탄소중립 사회 진입 기대
 - 기술분석학술용역(부문별 전문연구원 참여)+도민회의(최종 정책 권고안 도출)
- 기후영향평가 실시로 정책 전반에 대한 기후위기 영향 반영, 脫탄소, 친환경 녹색성장정책 구현으로 미래 新성장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
- 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출범('21.1.21.), 기후위기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일반도민과 공무원 등 사회 全분야의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실천기반 마련
- 경남·전남 **양 도지사**('21.2.26.), 의회('20.12.21.) COP28 공동유치 결의, 동서화합 및 지역상생발전 도모, 영호남의 탄소중립 의지 대내외 표명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O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기후위기행동 등 실천은 답보상태
-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 존재 ☞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, 정책개발(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부여 등) 및 언론노출을 통해 사회전반의 기후행동 확산과 협업체계 강화 추진